

전남광주 외국인 어업근로자 공공기숙사 ‘달랑 1곳’

계절근로자 63.5% 불구 소외 심각

정부 신축 고집...유류시설 활용 전무

기존 방식 완공까지 최대 4년 소요

이개호 “정책 방향 전환 필수” 지적

외국인 어업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이 특정 지역에 극심하게 편중돼 정착 인력 수요가 집중된 전남광주 지역이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7천408명 중 63.5%인 4천702명이 전남광주에 배치됐다.

그러나 이들의 주거 안정 수단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공공기숙사)의 지역별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은 11개소가 설치·운영 중인 반면, 최대 인력이 체류하는 전남은 고흥 1개소(운영 예정)에 불과해 심각한 주거 공급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지자체별 공공 부지 확보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강원 지역은 주요 항포구 인근 사유지 등 부지를 선제 확보해 공모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전남광주 등 타 지역은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후순위로 밀려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

현행 해수부 사업 지침이 신축 지원만을 고집하고 있는 점도 주거난을 가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신축 방식은 부지 확보·인허가·투자심사 등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선정 후 실제 완공까지 2~4년(경북 울진 46개월·강원 속초 32개월 등)이 소요된다.

여기에 어업인 협의의 지연·부지 변경 등 갖가지 정세 사유가 맞물리면서 어촌 현장의 시급한 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빈집·폐교 등 유류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지원이나 사업 지침 개정을 위한 정책 연구·타당성 검토 용역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현장의 주거난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은 “외국인 어업근로자가 급증하는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채 신축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어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소외된 전남광주 지역의 시급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 전환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촌 내 방치된 폐교·빈집·유류시설 등을 지자체가 장기 임차하거나 리모델링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물론, 방치된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상생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농식품부·농어촌공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1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업인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계획을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주요 상담 내용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 부기 유형과 종대한 불법 전용 해당 여부 등이다.

투기 행위로 판단하는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무단 휴경 또는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의 임대수탁과 공공임대용 농지매

입, 농지연금 등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상담은 대표전화(1811-882)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박선욱기자

閱시장 “6급 이하 공직자 호칭 ‘주무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옛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서로 다르게 불려온 6급 이하 실무직급 공직자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민 시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옛 광주에서는 ‘주임’, 옛 전남에서는 직급에 따라 ‘차관’, ‘주사’로 불려왔다”며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호칭 차이로 불편을 겪었던 사연을 소개했다.

민 시장은 “전날 열린 시정상황실 첫 회의에서 이 문제가 1호 안건으로 다뤄졌다”며 “직원들이 ‘주무관’으로 호칭을 통일하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최명진기자



시민공의 오픈데이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시민공의 오픈데이 행사가 열려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가운데)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시민공의 오픈데이는 시민사회단체와 공익활동 주체가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넓히는 행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

“중수청 정치기관 착각” 비판

중수청법상 감독권 첫 행사

임은정 “안타깝고 서글픈 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의 첫 감독권 행사로, 초대 청장 후보자 인사 검증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윤 장관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 글을 올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장관은 “공직부패와 경제·사이버·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기강을 세우는 것 역시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감찰 지시에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기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 재직 당시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한 상사에게 이의 제기권을 행사하고 검찰 내부망에 징계를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던 일을 언급했다. 임 청장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관행 개선을 끌어냈듯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청장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를 겨냥해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혜뉴스·오지현기자

▶1면 ‘호남 반도체 가속페달’서 계속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6조원 규모의 통합재정 지원은 특별시가 직접 사업을 편성·집행하는 재원인 만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민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최태원 회장께 320만 특별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리다”며 “SK하이닉스가 세

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장을 최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건설·운영할 수 있도록 부지·전력·용수는 물론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까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정말 일과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화정의 결심은 대담하고 의지도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남광주도 그 속도에 맞춰 부지와 전력, 용수, 인허가, 정

주 여건과 인재까지 가능한 모든 준비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날은 이제 상상이 아니다”며 “그날을 반드시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86만㎡(250만평)에 조성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2030년 6월 첫 생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광주매일신문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정506
모욕

피 고 인 김봉권

위 피고인은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사실의 증명에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
음을 공시함

2026. 9. 10.

판사 서형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제고합8
포고제2호위반

피 고 인 망 임만옥

위 피고인은 포고제2호위반 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에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6. 9. 29.

재판장 판사 김용규
판사 김민지
판사 최양우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임대
- A/S

T.375-5880

**광주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인접
부동산 매물들입니다**

1) 매매(매가11억)중흥6거리 광장코너 땅상업지 대지93평
2) 매매(4억5,000)중수청인접 대69평4층건물 월세330만원
3) 매매(13억5,000)중수청인접 대지193평 단층건물 평당700
법률사무실, 커피, 카페, 음식점 최적

4) 매매(2억8,800)중흥6거리 인접 대지64평 평당450만원
5)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 1층90평(면적분할가)
법무사, 변호사사무실 최적

6)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코너 2층70평(면적분할가)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기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은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228-0990, 010-4601-1390